



인재위원회  
2024.2.13.(화)

# 보도자료

담당: 인재위원회

연락처: (02)784-6271

## 더불어민주당 인재 13호 이훈기, 14호 노종면 윤석열 정권 YTN 민영화 규탄, 릴레이 1인 시위 나서

더불어민주당 인재 13호 이훈기 전 OBS경인TV 기자, 14호 노종면 전 YTN 기자는 2월 13일(화) 낮 12시부터 방송통신위원회(정부과천종합청사)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YTN 민영화를 규탄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YTN 최대주주를 한국전력공사에서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인 유진이엔티로 변경하도록 승인했다. 30년 동안 공적 소유구조를 유지한 보도전문 채널의 경영권이 민간기업에 넘어가는 것은 언론 역사상 전례없는 일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을 위한 민영화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도 밝혀져 법적인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 5명 중 과반인 3명이 공석인 가운데 준공영방송의 민영화라는 중대한 사안을 위원 2명이 결정했다. 그러나 이는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몰각하는 일이고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결정이다. 지난해 말 권태선 MBC 이사장의 항소심 고등법원 판결에도 2인 체제에서 내려진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취지가 확인된 바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부적절 기업을 무심사로 승인한 것도 지적된다. 유진이엔티는 자본금 1천만원에 대표이사 한명, 직원 한명인 사실상 유령회사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말 유진이엔티가 특수목적 설립 법인으로 향후 재무적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밝히며 승인을 보류했다. 그러나 두 달여 만에 출자자 변경 심사에 필수적인 심사위원회 재의결 과정도 생략한 채 무심사로 승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게다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유진그룹의 자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이 불법 자선 거래를 통한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발표했고 유진기업은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상황이다. 오히려 유진그룹 심사에 불리한 조건이 추가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한 셈이다.

윤석열 정부가 KBS, MBC에 이어 YTN 민영화까지 무리한 언론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결국 총선을 앞두고 언론장악을 마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오늘 1인 시위에 나선 이훈기 인제는 “폭압적인 방송장악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덮을 수는 없다”며 “YTN 매각 승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며 방송 공공성 후퇴에 앞장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인 위원은 법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종면 인제는 “YTN에 오랜기간 몸 담아왔고 이명박 정권 YTN 언론장악에 저항했던 사람이자 국민으로서 용산 출장소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태에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며 “불법으로 얼룩진 YTN 민간기업 매각을 당장 철회하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덧붙여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에 맞서 법적 조치를 비롯한 강력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